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목 차

■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정치 불확실성의 경제적 파급 경로	2
3.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4
4. 시사점	11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실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김 수 형 연 구 원 (2072-6217, soohyung@hri.co.kr)

Executive Summary

□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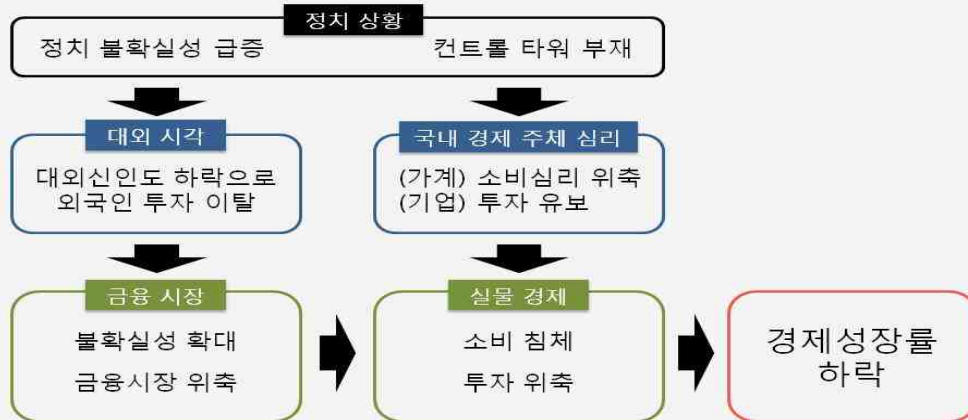
■ 개요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함정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정치 불확실성마저 증폭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과거 정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의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를 가늠해 보았다. 나아가 정치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았다.

■ 정치 불확실성의 경제적 파급 경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선 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또한 기업의 향후 경기 및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투자 심리도 냉각된다. 한편 해외경제주체들이 한국 경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경제의 회복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 불확실성이란 집권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심리지표 분석 측면에서는 한국갤럽의 국정 지지도, 시기분석 측면에서는 대통령 선거 연도로 간주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의 분석 방법 >

분석 형태	정치 불확실성 변수	영향을 받는 지표	분석 방법
심리지표분석	국정지지도	CSI, BSI	계량모형
시기분석	정권교체기 (대통령 선거 연도)	민간소비, 설비투자, 경제성장률	경험적 사실

■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①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심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치 불확실성(한국갤럽의 국정지지도)이 소비자심리지수(CSI) 및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해 본 결과 정치 불확실성의 확대가 CSI 및 BSI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식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지지도 10%p 하락은 CSI와 BSI를 각각 2.9p, 2.0p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 정치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치 불확실성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정치 불확실성이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권 교체기(대통령 선거 연도)와 그 직전연도와 비교를 통해 정치 불확실성이 미치는 실물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총 6번의 대선에서 대선 연도가 그 직전 연도에 비해 민간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이 각각 0.6%p, 4.0%p, 0.5%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어** 정치 불확실성 확대가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2002년과 2007년의 경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

< 정권교체기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연간 증감률 격차(정권교체연도 - 직전연도) >

	민간소비	설비투자	경제성장률
1987년 (6월 항쟁 및 13대 대통령 선거)	△0.7%p	△6.2%p	1.3%p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	△2.0%p	△12.2%p	△4.2%p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3.5%p	△17.9%p	△1.7%p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3.2%p	15.8%p	2.9%p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0.5%p	1.3%p	0.3%p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1.0%p	△4.6%p	△1.4%p
평 균	△0.6%p	△4.0%p	△0.5%p

자료 :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 당해연도는 대통령 선거 연도를 의미.

■ 시사점

최근의 심각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권이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국안정을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새 정부 출범까지의 과도기 동안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주체를 확립하여 민간의 심리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새 정부의 경제운용시스템이 정책공백 없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넷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우려되는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투기자금 유출입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생산 활동의 주력 부문인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들이 공감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강한 CEO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개 요

-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함정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구조를 선진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 최근 5년 동안 평균 2%대 경제성장률에 머무르는 저성장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장잠재력의 확충, 경제구조의 개혁 등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만 하는 상황임
 - 특히 대내적으로 산업구조 개편, 가계부채 문제 해소 등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
 -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따르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성장의 핵심 부문인 수출이 위협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으로 정책 공백의 우려가 높아지고 민간주체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는 이전의 정치 환경과 확연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음
 -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 향후 정권 교체의 시기와 과정 등 정치 일정이 상당히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어떤 경로를 따라가든지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겠으나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 이에 과거 정치 불확실성이 높았던 시기의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고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어떠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함

2. 정치 불확실성의 경제적 파급 경로

○ 정치 불확실성은 국내 민간경제주체의 심리를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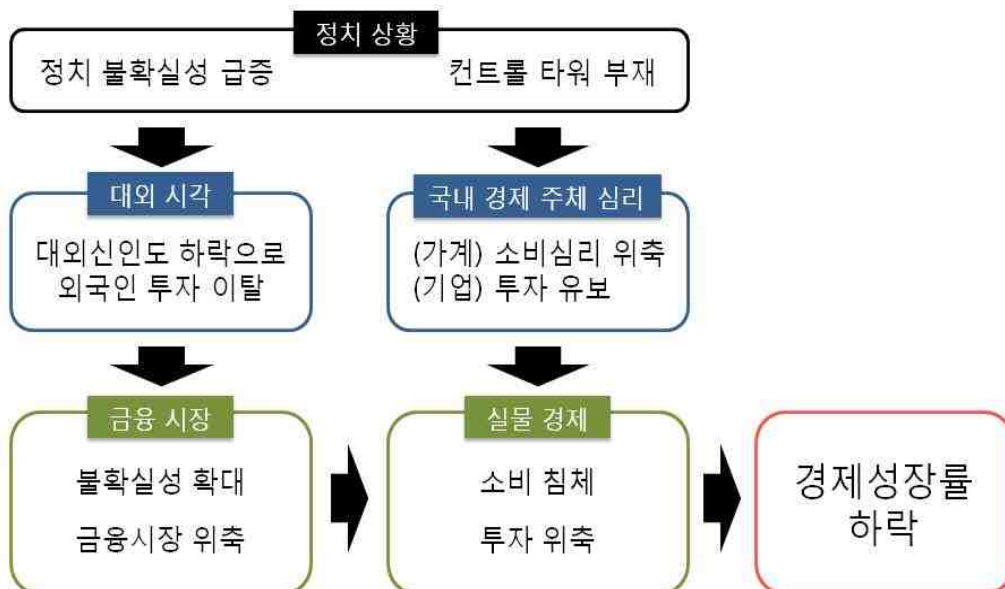
-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
 - 가계 소비는 어떠한 이유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는 동기가 작용할 수 있음
 -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소득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예비적 저축 (precautionary saving) 동기가 증대되어 현재의 소비를 감소시키려는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투자 유보) 기업의 향후 경기 및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
 -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거나 미래 경기 전망이 긍정적일 때 기업의 투자가 확대됨
 - 반대로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향후 경제상황도 크게 개선될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들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음

○ 해외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로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우려

- 대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외교 및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외교·안보상에 긴급하고 중요한 대외 이슈가 부상할 경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음
 -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경우 해외에서 보는 시각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해외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글로벌 자금의 이동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급격하게 높아질 우려가 존재
 - CDS 프리미엄 상승, 국제신용평가기관의 등급 하향조정 등과 같은 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수 있음
 - 이 경우 한국에 대한 금융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존재함
- 결과적으로 정치 불확실성은 국내민간경제주체와 해외경제주체의 심리를 악화시켜 내수 위축경로와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 침체가 유발될 가능성이 존재
-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대외경쟁력이 악화되면서 역시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3.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1) 분석 개요

○ 정치 불확실성의 개념 및 대리변수

- 정치 불확실성의 개념 정의

-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 불확실성이란 집권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함
- 현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지지가 약화되는 경우 정책 추진에 애로사항이 생기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
- 이에 따라 향후 현정부의 위상과 정국의 방향이 불투명해지면서 정치 지형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

- 정치 불확실성의 대리변수

- 분석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로 정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찾기 어려움
- 이에 본 보고서에서 심리지표분석과 시기분석의 두 가지의 분석 형태를 사용하며, 우선 심리지표분석에서는 한국갤럽의 국정지지도를 정치 불확실성의 대리변수로 간주함
- 다음으로 시기분석은 구체적인 대리변수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선거연도와 직전연도의 실물경제지표들의 변화를 살펴 봄

< 본 보고서에서의 분석 방법 >

분석 형태	정치 불확실성 변수	영향을 받는 지표	분석 방법
심리지표분석	국정지지도	CSI, BSI	계량모형
시기분석	정권교체기 (대통령 선거 연도)	민간소비, 설비투자, 경제성장률	경험적 사실

(2)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심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요

-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및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자료와 소비자심리지수(CSI) 및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대해 회귀분석을 사용

○ (분석 방법) 정치 불확실성(한국갤럽의 국정지지도)이 소비자심리지수(CSI) 및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

- 한국갤럽의 국정지지도를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활용
 -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의 비율(국정지지도)의 분기별 자료를 정치 불확실성¹⁾에 대한 대리변수로 활용함
 - 국정지지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리변수로서의 한계는 존재하나²⁾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평가 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 비율(국정지지도) 통계

- 한국갤럽은 1988년 ~ 2011년까지는 비정기적으로, 2012년 이후로는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988년 이후부터 분기별 국정지지도 자료를 보유
-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부정/중립/모름으로 응답하며 이 중 긍정적 응답의 비율을 국정지지도로 활용
-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1회 조사당 응답자의 수는 1988년 ~ 2011년까지는 500 ~ 2,000명 내외³⁾, 2012년에는 1,500명 내외, 2013년 이후는 1,000명 내외

1) 정치 불확실성과 국정지지도는 역의 상관관계를 가짐.
 2) 특히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인 소비자심리지수(CSI) 및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국정지지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3) 1988년~2011년에는 조사에 따라 응답자의 수와 조사방법(전화면접/가방방문 등)이 상이.

- 가계의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를 각각 CSI와 BSI로 측정
 - CSI와 BSI는 각각 소비자와 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종합하는 지수로 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대표함
 - 두 지표 모두 100을 기준으로 0 ~ 200 사이에서 변동하므로 단위나 물가 변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CSI 및 BSI를 종속변수로 하고 한국갤럽의 국정지지도를 주된 설명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함
 - 설명변수에 정치 불확실성과 역(逆)의 상관관계를 갖는 국정지지도를 포함시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CSI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는 가계의 소비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성장률, 실업률,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등이 포함됨
 - BSI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성장률,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증감률, 시중금리 등이 포함됨
 - CSI는 1996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BSI는 2003년 1분기부터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며 역대 대통령별 가변수를 추가
 - 모든 변수는 실질변수를 사용하며 경제성장률,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은 계절조정 변수의 전기대비 증감률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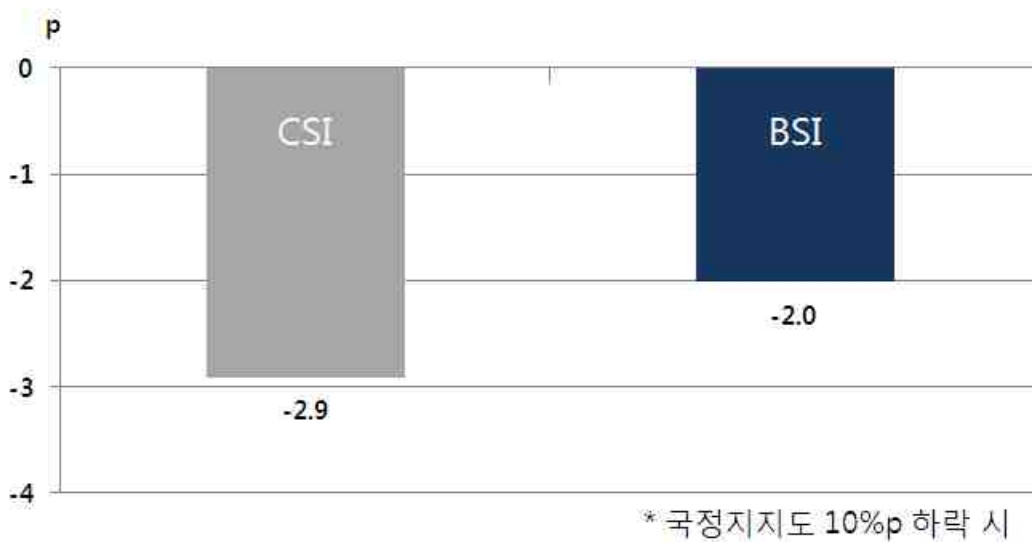
< 추정식 >

- $Y_t = \beta X_t + \gamma C_t + \epsilon_t$
- Y_t 는 CSI 또는 BSI
- X_t 는 국정지지도
- C_t 는 통제변수로 대통령별 가변수(dummy), 경제성장률 등 (종속변수로 CSI를 사용할 때와 BSI를 사용할 때 통제변수의 구성이 상이)

○ (분석 결과)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정치 불확실성의 대리변수인 국정지지도 하락이 CSI 및 BSI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국정지지도와 CSI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치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심리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정지지도가 10%p 하락할 시 CSI는 2.9p 하락하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의미를 가짐
- 국정지지도가 하락함에 따라 BSI 또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치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임
 - 국정지지도가 10%p 하락할 시 BSI는 2.0p 하락하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의미를 가짐

< 정치 불확실성 확대(국정지지도 10%p 하락) 시 CSI 및 BSI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 한국은행의 CSI, BSI 통계 기준.

(3) 정치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개요

-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치 불확실성이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권 교체기와 그 직전연도와의 비교를 통해 정치 불확실성이 미치는 실물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다만 본 분석의 한계점으로는 실물거시경제지표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과소 또는 과대 식별될 가능성이 있음

○ (분석 방법) 정권 교체기의 정치 불확실성이 급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도와 그 직전연도와의 비교를 통해 정치 불확실성 확대의 효과를 분석

- (정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의 선정) 1987년 6월 항쟁 및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정권 교체로 정치 불확실성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연도를 선정
 - 분석 대상 시기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13대~18대 대통령 선거)과 각각의 직전연도임
- (비교 대상 지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시경제지표인 민간 소비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경제성장률을 비교
 - 수출은 다양한 대외 요인까지 영향을 받는 지표로 판단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분석 결과) 총 6번의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선 연도가 그 직전 연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은 0.6%p, 설비투자 증가율은 4.0%p, 경제성장률은 0.5%p가 하락했던 것으로 분석됨

- 총 6번의 대선에서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대통령 선거 직전 연도에 6.5%에서 대통령 선거 연도에 5.9%로 0.6%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총 6번의 대통령 선거 시기 중 2002년 및 2007년의 경우 각각 3.2%p 및 0.5%p가 높아진 것이 발견됨

< 정권교체기의 민간소비 증가율 변화 >

	직전연도(A)	당해연도(B)	차이(B-A)
1987년 (6월 항쟁 및 13대 대통령 선거)	9.1%	8.4%	△0.7%p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	8.9%	6.9%	△2.0%p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7.6%	4.1%	△3.5%p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5.7%	8.9%	3.2%p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4.6%	5.1%	0.5%p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2.9%	1.9%	△1.0%p
평 균	6.5%	5.9%	△0.6%p

자료 :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 당해연도는 대통령 선거 연도를 의미.

- 총 6번의 대선에서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대통령 선거 직전 연도에 9.3%에서 대통령 선거 연도에 5.3%로 4.0%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총 6번의 대통령 선거 시기중 2002년 및 2007년의 경우 각각 15.8%p 및 1.3%p가 높아진 것이 발견됨

< 정권교체기의 설비투자 증가율 변화 >

	직전연도(A)	당해연도(B)	차이(B-A)
1987년 (6월 항쟁 및 13대 대통령 선거)	25.6%	19.4%	△6.2%p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	16.1%	3.9%	△12.2%p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9.6%	△8.3%	△17.9%p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8.8%	7.0%	15.8%p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8.4%	9.7%	1.3%p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4.7%	0.1%	△4.6%p
평 균	9.3%	5.3%	△4.0%p

자료 :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 당해연도는 대통령 선거 연도를 의미.

- 총 6번의 대선에서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대통령 선거 직전 연도에 7.1%에서 대통령 선거 연도에 6.6%로 0.5%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총 6번의 대통령 선거 시기중 1987년, 2002년 및 2007년의 경우 각각 1.3%p, 2.9%p, 0.3%p가 높아진 것이 발견됨

< 정권교체기의 경제성장률 변화 >

	직전연도(A)	당해연도(B)	차이(B-A)
1987년 (6월 항쟁 및 13대 대통령 선거)	11.2%	12.5%	1.3%p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	10.4%	6.2%	△4.2%p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7.6%	5.9%	△1.7%p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4.5%	7.4%	2.9%p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5.2%	5.5%	0.3%p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3.7%	2.3%	△1.4%p
평 균	7.1%	6.6%	△0.5%p

자료 :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 당해연도는 대통령 선거 연도를 의미.

4. 시사점

-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성장 부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조기 정국안정 노력, 과도기 경제 컨트롤 타워 확립, 새 정부의 공백 없는 경제운용시스템 가동을 위한 선제적 준비, 국내금융시장 불안 방지, 기업의 강한 CEO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권이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국안정을 통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 헌법이 삼권 분립을 규정하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어느 한쪽에 권력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그러나 행정부의 기능이 취약해진 현상황을 고려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대신하여 국가의 방향성을 잡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임
- 특히 정치권이 조속한 시간 내에 정치일정의 합의된 방향성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둘째, 새 정부 출범까지의 과도기 동안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부주체를 확립하여 민간 부문의 심리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를 냉각시켜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음
- 새 정부의 출범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과도기 동안 경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정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경제부처간 정책 조율 과정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함

셋째,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새 정부의 경제운용시스템이 정책공백 없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는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부의 추진력 취약성과 민간의 소극적 협력 등으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경제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은 현 정부의 기존 진행중인 경제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집행 과정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의 경제시스템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존 소관 정책들에 대해 이행상황 파악, 성과 및 문제점 분석, 대안 개발 등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임

넷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우려되는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국제자본이동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최근 OECD가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를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해외 경제주체들이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임⁴⁾
- 특히 단기적으로는 국내금융시장에서 외화 유출입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그것이 다시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 이에 금융당국은 외환, 주식,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이동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임

4) OECD는 지난 11월 28일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2.6%로 0.4%p 하향조정하면서 세계 교역회복지원 가능성, 스마트폰 사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언급함.

다섯째, 생산 활동의 주력 부문인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들이 공감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강한 CEO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경제의 방향성과 기업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강한 CEO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
 - 대외 경영 여건이 불확실할 경우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미루어지고 현상 유지 전략으로 가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 그런 시기일수록 협력업체, 직원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의사결정자를 주시하기 때문에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 한편 기업의 대외 신용 관리에 주력하고 금융리스크 관리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임
 -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응하여 글로벌 고객 관리 및 국외 영업 기반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또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금융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정치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증폭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함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김수형 연구원 (2072-6217, soohyung@hri.co.kr)